

비트코인 1.9만弗 붕괴... 암호화폐, 바닥 더 남아 '전망 암울'

작년 11월 최고가 대비 72% 급락
시총 2위 이더리움은 97% 폭락

전문가들 "1.7만弗도 붕괴되면
1만弗까지 추락은 시간문제"

암호화폐시장이 붕괴되면서 비트코인 1만9000달러도 붕괴됐다. 암호화폐 담보대출 업체들도 줄줄이 예금 인출을 중단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바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만9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0일 3만달러가 무너진 지 일주일 만에 2만달러가 붕괴됐고 지난해 11월 최고가(6만9000달러) 대비 72% 폭락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1000달러가 붕괴됐다. 최고가 대비 97% 폭락한 수치다.

앞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	Name	Price	24h %	7d %	Market Cap	Volume(24h)	Circulating Supply	Last 7 D
1	Bitcoin BTC Buy	\$18,438.57	▼9.91%	▼32.66%	\$349,209,464,478	\$42,653,753,275 2,329,419 BTC	19,071,125 BTC	
2	Ethereum ETH Buy	\$954.07	▼11.76%	▼34.55%	\$115,012,854,073	\$22,366,017,676 23,573,758 ETH	121,223,422 ETH	
3	Tether USDT	\$0.9987	▼0.02%	▼0.02%	\$68,085,724,916	\$63,083,210,239 63,164,285,709 USDT	68,173,229,691 USDT	
4	USD Coin USDC Buy	\$1.00	▼0.01%	▲0.02%	\$55,400,216,515	\$7,237,052,862 7,234,194,123 USDC	55,378,332,644 USDC	

비트코인 1만9000달러가 붕괴되면서 하락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인마켓캡

지지선을 2만달러로 제시하면서 붕괴 시 대규모 매도세를 예측했다.

중국 가상화폐거래소 BTCC의 설립자 바비 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2만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매도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만달러 붕괴 직후 1만8000달러까지 24시간도 걸리지 않아 청산 포지션으로 전환되면서 하락세가 더 거세졌다.

전문가들은 1만7000달러까지 붕괴될 경우 1만달러 추락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제이 헛필드 인프라스트럭처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만달러는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이었지만 2만달러가 무너지면서 올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역시 "비트코인의 1차 지지선은 1만7000달러, 2차 지지선은 1만2000달러"라며 "만약 1만2000달러 선이 붕괴되면 빠르

게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암호화폐시장은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다.

암호화폐 관련 대출업체인 '바벨 파이낸스'가 예금인출을 중단하면서 또 다시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2021년 말 기준 바벨 파이낸스의 대출 잔액은 약 30억달러(3조8850억원)다. 평균 월 파생상품 거래량은 8억달러, 옵션상품은 200억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적지 않은 암호화폐 대출업체다.

앞서 '셀시우스'도 인출을 중단하면서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대출업체들이 연이어 입출금을 중단하자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기업들의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는 전날 가상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스캐피탈(3AC)'이 마진콜 대응 실패를 확인하고 관련 담보를 청산했다.

바비 리도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마진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흔들린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심리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크립토공포·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6포인트를 기록해 2019년 9월 22일 5포인트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내달 전기요금 오른다... 인상폭 최소화”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 장관회의
5월 소비자물가 이미 5.4% 상승
전기요금 인상에 6%대 상승 우려

국제 유가 인상과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내 소비자 물가가 뛰는 가운데, 내달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물가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공공요금에 최근 물가불안을 부추기지 않도록 인상폭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인상폭을 최소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고심해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최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 당 3원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

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한전은 이에 더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려면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한을 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요금 인상분을 당장 전기요금에 반영해 올리지 못할 경우라도 인상분을 '미수금'으로 해 추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가 적절히 판단해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올해 연간 적자 규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가 임박한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뉴스1

모가 30조에 달할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추가적인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9.6% 올라 지난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

록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는데 이 중 전기·가스·수도 기여도가 0.32%포인트에 달한다. 5월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6%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원용수 기자 hys@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 1면 '넷제로 대전환의 시대'서 계속

기존 기업 경제 질서를 뒤엎을 기회면서 동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야 하는 '밀 빠진 독'이 되고 그러면서도 당면한 과제로서의 공감대가 있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함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전체 7위, 1인당 배출량 6위에 달한다. 2018년 기준 7억 3000만톤(t)을 배출했는데 이 중 37%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36%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된다. 생산 전기의 상당수가 산업 부문에 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는 55% 수준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3대 산업의 배출량의 산업 분야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2030NDC가 발표된 후 산업계는 과도한 목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산업 분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생산공정·산업구조 전환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대체 원료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사용 중단하고 공정과정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로화 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또한 저탄소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주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다른 국가의 저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우리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넷제로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3대 탄소배출 산업 분야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회로 철강분야 '그린철강위원회', 석유화학업계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시멘트업계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각각 출범했다. 그린철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연구원과 'ESG 글로벌 서밋'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시대에 탄소 중립 시대를 주도하는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0%에서 37%까지 내린다.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리터(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범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ℓ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내리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종=원용수 기자 won@